소방관들 왜이러나

여성 원룸 몰카 설치·여고생 성추행까지

성추행·절도….

'안전 지킴이' 소방관들의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은 3일 여성 세입자가 사는 원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담양소방서 소속 A(4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원룸 주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광산구 모 원룸 건물 4층에 세들어 사는 B(여·37)씨의 방에 침입, 에어컨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고 컴퓨터를 설치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원룸 기물이 자주 파손돼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6일엔 영광소방서 소속 C(27)씨는 하교 중인 여고생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한 도로에서 여고생(18)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는 척 속여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화순 소방서 소속 D(30)씨는 지난 4월 29일 모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누군가 놓고 간 현금 5만원이 든 지갑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소방관들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소방관 내부에서조차 "기강이 풀어질 데까지 풀어진 게 아니냐"라며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남도소방본부는 각 소방서 과장급을 대상으로 성교육 실시 계획을 세우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관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성매매 교사 '몰래 퇴직'

퇴직금·수당 삭감 피하려
학교, 범죄조회 않고 처분

가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광주지역 한 특수학교 교사가 범죄행위를 숨긴 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행위로 면직될 경우 퇴직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삭감되지만, 이를 숨기고 퇴직하면 퇴직금과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광주지역 모 사립 특수학교는 교사 A씨를 퇴직 처리했다. 일주일 뒤인 지난달 27일 전북경찰청은 광주시교육청에 A씨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다고 통보했다. 이미 퇴직 처리가 돼 민간인이 된 것이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퇴직할 때 규정에 따라 자체 징계 여부와 경찰청 범죄 조회를 통해 별다른 이상이 없을 때에만 2월 말과 8월 말에 퇴직 처리를 한다. 범죄에 연루되면 퇴직을 보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파면과 같이 퇴직금과 수당의 절반이 삭감된다.

하지만 이 사립 특수학교는 A씨에 대한 경찰청 범죄 조회 없이 A씨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퇴직 처분했다.

문제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권이 전적으로 학교법인에 있고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데 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 와 갑자기 퇴직을 요청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며 "학교도 나중에야 경찰에 입건된 사실을 알고 퇴직금 신청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가출 여중생(15)을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1)씨를 구속하고, 성매수남 A씨 등 500여 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업무 칸막이에 답변 한 달 넘게 '미적'

'정부 3.0'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해봤더니…

부처 간 떠넘기기 행태 여전
답변 내용·형식도 제멋대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가 여전하고, 국민이 필요해 요청하는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우선,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구상과 달리, 현장 분위기는 별로 바뀌지 않았다.

서해어업단의 경우 지난 4월 25일 '어업지도선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한 달이 지난 5월 27일에야 응답이 왔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3.0 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

서해어업단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날로 흉포해지고 교묘해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맞선 우리측 어업지도선이 지나치게 낡고 느리다는 지적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었다.

그러나 서해어업단은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센터에 문의하고 재차 요청한 뒤에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조직 개편 된 뒤 조직 이관 신청이 느려져 지연됐다"고 밝혔다.

다른 부처도 형편은 비슷하다. 정부의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지난 4월 요청한 '식육(食肉) 100g당 가격표시제 17개 시·도별 이행률 현황' 자료의 경우 복지부가 지난 1월 말 전국 이행률을 조사해 파악한 바 있다. 따라서 의지만 있다면 하루면 처리될 내용이지만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다며 떠넘기더니 결국 전국 자치단체로 다시 넘어가 10일 이상 소요됐다.

공개 내용도 요청자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남경찰은 '5대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애초 요청했던 전자 파일 형식이 아닌, 우편으로 제공했고 요청 내용과 맞지 않는 자료를 제공한 경찰서도 있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창포물에 머리감기 3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 환벽당에서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이 한복을 입고 단오절 세시풍속으로 전해오는 창포(菖蒲)물에 머리 감기 체험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권총 자살 시도 북부서 간부 끝내 숨져

승진한 날 권총 자살을 시도〈광주일보 3일 6면〉한 광주북부경찰서 용봉지구대 소속 A경위(48)가 끝내 숨졌다.

A경위는 지난 2일 밤 8시40분께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광주 모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A경위는 전날 오후 3시10분께 용봉지구대 2층 체력단련실에서 왼쪽 허벅지·머리에 실탄을 맞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경찰관이 발견, 광주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었다.

경찰은 평소 A경위가 업무 스트레스를 자주 호소해 왔다는 유족 등의 진술에 따라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경위는 지난해 2월 북부경찰서에서 용봉지구대로 발령난 뒤 최근 본인의 요청으로 소속 팀을 한 차례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괴롭히던 친구가 일하던 편의점서
18차례 물건 훔친 고교생 4명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3일 자신들이 괴롭히던 친구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이모(17·고2)군과 같은 학교 후배 최모(16)군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3일 오후 1시께 나주시 금천면 조모(54)씨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생 A군(16)의 시선을 끈 뒤 담배 2보루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총 18차례, 9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자신들이 괴롭히던 학교 친구 A군이 일하는 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피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렬기자 halo@

한빛원전 비정규직 노조 파업

한빛원전(구 영광원전)의 협력업체 직원 80여명이 임금 인상과 노조 활동 보장을 주장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비정규직 노조 영광지회는 3일 한빛원전에서 기계·전기·조명 등 일반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9개 협력업체의 노조 80여명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앞에서 집회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무면허 '필러' 성형시술 40대女 덜미

쌍나팔

○…숙박업소 등지에서 주부 등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 시술을 한 40대 여성이 경찰서행.

○…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송모(여·48)씨는 지난해 9월 22일께 광주시 광산구 한 숙박업소에서 이모(여·43)씨의 이마·코에 성형 시술용 약품인 '필러'를 투여한 뒤 95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여성 40명을 상대로 60회(6300만 원 상당)에 걸쳐 무면허 시술을 한 혐의.

○…지난해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씨의 불법행위로 일부 피해자는 얼굴이 비대칭으로 보이거나 장기간 붓는 등 부작용.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